

# 여야, 오늘부터 개헌안 협상 돌입 합의

### 권력구조 개편 · 선거제도 개편 · 권력기관 개혁 · 투표시기 등 4대 의제... 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연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상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내일부터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며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라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의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내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고, 또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의숙 법제처장이 진정구(왼쪽) 국회 사무처 입법처장에게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는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대정부질문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될 4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국민권력 기관 개혁 ▲국민 투표 시기 등이다.

앞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 안건인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의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

의 제안설명을 했다. 제안설명을 들은 참석 국무위원이 앞에 마련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서명하는 '부서(副署)' 형태로 의결이 이뤄졌다.

개헌안은 오후에 국회에 전달됐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24일이다. /김진성 기자

### 김춘진 "청년일자리사업단 신설하겠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사진)는 '청년일자리사업단'을 신설하여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친화형 창업 환경을 조성하며 '청년보좌관'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발굴 실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전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불러와 지역 활력을 떨어뜨리고 다시 청년유출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북의 입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청년일자리를 챙기겠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본위로 정무직등에 중용, 신설하는 '청년일자리사업단' 단장은 공모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청년조직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청년보좌관'을 임용하고 '청년일자리 고충상담센터'를 설치,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실행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검찰, MB 첫 방문조사 무산... 2시간40분만 철수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던 검찰이 약 2시간40분 만에 철수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시간을 잡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3시20분께 기자들에게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를 투입해 다소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측은 오후 12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일체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잘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원세훈, '좌파' 단어 뺐다고 직원 좌천시켜"

### 유성욱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증인 출석 "용어에 강경... '좌파' 뺐 4급 직원 지방행"

원세훈(67·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장이 댓글공작 등의 진행 과정에서 단어 하나를 트집 잡아 직원을 지방으로 보냈다는 전 심리전단장의 법정 증인이 나왔다. 그만큼 원 전 원장이 정치공작에 있어 비이성적이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8차 공판에서는 유성욱(61·불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유 전 단장은 검찰이 2009년 2월16일자

심리전단 주요 업무보고에 '친북좌파 무력화', '좌파 척결 국론통합 원년화 추진' 등의 표현이 있는 것을 제시하자 "심리원은 기본적으로 용어가 중요하다"며 "당시 원 전 원장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 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라는 개념이 정치인을 포함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통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원장님 말씀이나 다른 관련자 진술을 보면 원 전 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정해 비판하

면서 중북좌파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있지 않느냐"고 되물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로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는 국정원에 오래 근무해서 휘말려선 안되겠다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유 전 단장은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당시 야당, 정치권에 관여해선 안되겠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지시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오해를 했다고 했는데 단

어 선택들이 썼다는 건가"라고 묻자 "용어 자체에 강경했다. 4급 직원이 (보고서에) '지난 좌파 10년 정부'에서 '좌파'라는 말을 뺐다고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그런 업무에 대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의를 달면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77·구속)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민병주(60·불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외곽팀'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추가기소됐다. /뉴시스

### "홍준표·장제원에 입마개 씌우면 국민 행복해질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6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향해 "이 두 사람에게 입마개를 씌우면 국민이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장 듀엣의 계속되는 막말공해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심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5일 울산지방경찰청이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며 "14만 경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주는 떡도 마다하는 울산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니 경찰 수사권 독립은 아직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며 "정권과 유착해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 퍼런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미친개는 동물이야 약"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